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신 효 숙*

I. 머리말

II. 북한교육 연구의 동향

III. 북한교육 연구의 쟁점과 과제

IV. 맺은 말

Abstract

Issues and Prospects of North Korean Educational Study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esent prospects of North Korean educational study, through discussing the issues and evaluating the results of study. Area of North Korean educational study has been surprisingly extended since 1990, especially after the historical South-North Korean summit talks. Thus focusing to recent study results of North Korean education, this research values issues and efforts, and tries to show directions of development in the future.

In accordance with the aim of the study, in the second chapter by arranging present conditions of North Korean educational study in

periods and subjects, it displays characteristics and limits of the study. The third chapter classifies results of North Korean educational study into detailed subjects which include methods and theories of the research, the educational policy and object, the compulsory educational policy and school educational system, social functions of education, and the historical study of education. They presented and evaluated issues that could be disputed. The conclusion assesses overall outcomes of studies and shows developmental directions of North Korean educational studies.

Key Words: North Korean Educational Study, Issues and Prospects, Methods and Theories of Research, Educational Policy and Object, Compulsory Educational Policy, School Educational System, Social Function of Education

*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I. 머리말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북한 및 북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에까지 적지 아니 확산되었다. 북한 관련 연구진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였다. 과거 북한교육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정부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에 비한다면 최근에는 다양한 개별 연구자들이 이에 합류하고 있다. 한편 북한교육의 연구 지평이 놀랄 만큼 확산되었지만 그것은 양적 증가에 한정되어 있을 뿐 이 분야의 질적 수준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공존하고 있다. 북한교육 연구에 대한 이러한 평가는 북한학의 발전과정에서 이해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오랫동안 북한학 및 그 세부분야인 북한교육은 학문의 연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북한교육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이것은 교육적 관심에서가 아니라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되었다. 정치학을 비롯한 여타 전공자들이 북한교육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들 연구의 대부분이 ‘북한교육 = 정치사상교육’이라는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정치사상교육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렇게 된 이유에는 남북한의 적대적 체제경쟁이 극에 달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냉전시대에 남북한의 체제경쟁은 이데올로기를 다루는 교육 분야에서 특히 활발하였다. 북한은 남한에 대한 체제경쟁에서 노동자, 농민들도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무료교육임을 과시하였다. 세계에 자랑할만한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나라임을 선전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남한은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평등한 자유민주주의 교육임을 과시하였다. 대신에 북한교육을 독재 정권 및 김일성·김정일 부자세습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사상교육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북한의 무료교육을 학생들의 노동력 착취의 당연한 대가이자 조직적 정치사회화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북한교육에 대한 이러한 평가적 정책연구는 1980년대에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연구 경향은 1990년대를 지나면서 역전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중반에 북한 붕괴론이 간헐적으로 제기되면서 체제통합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어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에 힘입어 평화적 통일준비의 필요성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 속에서 북한교육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연구자의 입장과 시각에 따라 통일에 대비한 다양한 남북한 교육의 이념·제도·내용 통합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대중적으로는 북한바로알기운동이 확산되었고 연구자들 간에는 북한에 대한 객관적 연구의 필요성이 한층 제고되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대상으로서 북한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게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최근 연구자들은 북한의 교육현상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이해에 기초한 연구 성과물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고, 다양한 영역에 걸쳐 연구의 기초 토대를 마련하였다. 과거에 비해 놀랄만한 북한교육의 연구 지평의 확대를 바라보면서 현재까지의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의 발전 방향을 제기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교육 연구의 동향과 쟁점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교육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II. 북한교육 연구의 동향

북한 연구는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1960년대에 비로소 싹트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 학문으로서 북한 연구의 문제가 제시되었다. 북한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무지와 북한 연구에 대한 소극성은 1980년대 후반까지도 계속되었다. 이 중에서 상당량의 북한교육 연구가 정부주도로 이루어졌고, 반공적 시각이 강하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었다. 학문적으로 접근한 북한교육 연구물은 그리 흔치 않았다. 1990년대에 들어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연구자들에게 연구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1970년대 북한교육 연구는 주로 국토통일원과 북한연구소 등 정부기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국토통일원은 북한교육의 이념·제도·과정·내용 등 부문별 연구를 주도해 왔다. 교육정책과 이념, 교육제도의 변화, 교육과정과 교과서 분석, 정치사상교육 등 다양한 연구영역을 포괄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들은 교육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적지 않았다. 시기 구분의 예를 들자면, 북한교육 연구는 대부분 공산주의 도입기에 이은 김일성의 유일사상체제의 확립과정에 따른 이념적·정치적 변화로 구분되어 교육적 분석이 이루어졌다.

국토통일원에서 발행된 대표적 단행본과 논문으로는 노계현(1980), 김정태(1982), 최광석(1970, 1975), 김순천(1972), 박용헌(1983) 등이 있다. 북한연구소

에서 발행된 <북한교육론>(1977)과 <북한총람>(1983)의 ‘교육편’도 이 시기에 발간된 대표적인 연구물이다. 동시에 이 시기가 냉전적 시각에 의해 반공과 용공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연구의 가치가 재단되는 환경임에도, 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해외에서 일부 학자들에 의해 북한교육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외에서 이루어진 연구로는 김형찬(1969), 박용현(1975), 성하운(1976), 김선호(1979), 이서행(1980), 김동규(1981), 이중(1982), 양성철(1983)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반으로 이후 연구는 주제·관점·방법 면에서 보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북한연구의 특징으로는 연구의 중심이 국토통일원과 북한연구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변화로는 정치학자가 아닌 교육학자에 의해서 교육학적 시각으로 북한 교육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교육은 국가기구의 한 부분으로서 정치경제 분야에 비해 부차적으로 다루어졌다면 이제 교육은 교육현상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도 정부연구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정책 현안 위주의 남북한 통일에 대비한 정책연구를 주로 수행하였다. 북한체제 붕괴에 대비한 남북한의 교육체제·교육제도·교육행정·교육과정 통합에 관한 연구가 그 대표적 사례이다.¹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정책연구와 더불어 귀중한 업적으로 평가될만한 북한 교육 기초연구를 꾸준히 수행하였다. 대표적 연구물로는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연구>(1998), <북한이탈주민의 남한교육 적응 연구>(1999),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 연구>(1999), <북한교육 관계 법령 연구>(2000),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2001), <북한의 경제발전과 교육의 역할>(2003) 등이 있다. 통일에 대비한 북한교육 기초연구로서 문헌분석 방법과 실증적 연구방법을 주로 활용하였다.

북한교육 연구는 국책연구기관이 아닌 소수이지만 개별 연구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져 왔다. 1980년 말경까지 이들의 연구 경향으로는 북한교육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이거나 정치사상교육·교육제도·교육과정·고등교육·중등

¹ 정용길 외, 『통일 상황 대비 교육통합 단기대책 연구』(서울:교육부, 1996); 한종하 외, 『통일대비 교육부문 대책 종합연구-급변상황에 의한 통일시의 남북한 교육통합방안』(서울:한국교육개발원, 1994) 등이 대표적 연구이다.

교육·취학전 교육 등 부문별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1990년을 전후한 시기에 개론서 형식의 부문별 연구가 보다 세분된 연구의 경향을 띠기 시작했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적 연구로는 문용린(1987), 고려대학교평화연구소편(1990), 김형찬(1988, 1990), 김동규(1990), 전용선(1993) 등을 들 수 있다.

1990년대 들어 소장학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북한교육 연구가 보다 활기를 띠게 되었다. 연구가 총론적 수준을 벗어나서 주제의 다양화와 세분화, 연구방법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김형찬, 김동규에 이어서 한만길, 최영표가 북한교육 연구의 영역을 넓혀 나갔고, 여기에 박사학위자들이 가세하였다. 최민수, 신호숙, 이향규, 조정아, 김지수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제 북한교육 연구는 주제와 시기, 그리고 연구방법에 있어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문별·주제별로 북한교육의 연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정치사상교육 관련 주제는 조병옥(1992), 김용찬(1994), 진유범(2001), 전미영(2001), 윤종진(2004) 등이 다루었고, 교육체제와 교육행정 분야는 나항진(1993), 교육인적자원부(2000), 한만길 외(2004), 김지수(2001, 2005) 등이 연구하였다. 해방 이후시기 북한교육에 관한 연구는 김기석, 신호숙, 이향규가 다루었고, 사회교육과 성인교육 관련 주제는 이지연(1992), 이금명(1993), 최영표(2000), 조정아(2003, 2005) 등이 다루었고, 유치원교육 분야는 최민수(1996), 박재환(1999), 그리고 고등교육 분야는 정영수(1999), 신호숙(2005) 등이 다루었다. 또한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공산권 교육의 과거·현재·미래>(1988), 및 북한과 중국의 교육을 비교한 최영표(1988), 채규철(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최근 가장 활발하게 다량의 연구물이 쏟아져 나온 분야로는 교과서와 교육내용 분야를 들 수 있다. 북한의 교과서와 교육내용을 분석한 연구자로는 김정일(1993), 이인제(1996), 김인전(1997), 김남주(2000), 김선규(2000), 나경은(2001), 남호엽(2001), 엄현아(2001), 이영희(2001), 전성희(2001), 이은영(2002), 차우규(2003), 오기성(2003), 박찬석(2003), 권성아(2003), 임미화(2003), 김기석(2003) 등이 있고, 남북한의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비교한 연구자로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연구를 포함하여 이찬희 외(1997), 최석진 외(1997), 노석구(1995, 2001), 하태기(2000), 최현호(2002)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가 유례없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교과서의 분석 대상이 과거 정치사상 및 이상화 과목, 국어·수학의 주요 과목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에는 과학 및 예체능 과목에 이르기까지 전

과목으로 확대되었다. 연구 경향에 있어서도 교육내용의 이데올로기적 성격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의 난이도·주제·편성 원칙과 방법 등 비교준거에 따른 심층적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편 최근의 교육과정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기존 연구의 분석 수준이 대체적으로 국가 수준의 ‘공식적 교육과정’, ‘의도적 교육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김기석(2003)은 ‘잠재적 교육과정’, 또는 ‘전개된 교육과정’ 연구로 그 영역을 확대한 점이다.² 그는 국가의 교육과정안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 북한사회가 추구하는 공식적 교육과정을 분석하는 데 머물지 않고, 교육과정 자료 및 교사와 학생 출신 북한이탈주민의 구술자료를 활용하여 ‘전개된 교육과정’에 주목하여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은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안과 교과서가 표방하고 있는 교육목표, 구체적인 교사의 수업을 통하여 이것이 실현되는 정도, 학생들이 실제로 이를 학습한 정도 등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가능케 할 것이다. 북한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는 시작 단계로서 보다 폭넓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

Ⅲ. 북한교육 연구의 쟁점과 과제

1. 연구방법과 이론

북한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헌분석에서 유의할 점으로는 북한의 1차 자료들은 대부분 공식적이며 선전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자료들을 유용성 있는 자료로 만들기 위해 문헌의 성격을 파악하고 의미를 해석하고 맥락을 분석하는 문헌자료의 객관적 분석과 해석의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문헌분석방법은 다양

² 김호권은 교육과정을 ‘의도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의 세 수준으로 구분한다. ‘의도된 교육과정’은 법령으로 공표된 목표로서의 교육과정에 해당된다. ‘전개된 교육과정’은 수업 속에 반영된 교육과정으로 교사의 실제 수업행위를 의미한다. ‘실현된 교육과정’은 학습성과로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로 배운 교육과정이다. 이 외에 ‘잠재적 교육과정’이란 교사가 제시하는 공식적인 교육목표 속에는 언급되지 않지만 암암리에 효과적으로 교육되는 규범과 가치를 의미한다. 김기석 책임, 『북한의 교육과정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연구위원회, 2003), pp. 4~5.

한 문헌들에 대한 담화 분석을 통해서 북한연구의 과학화와 체계화를 모색해 가고 있다.³

문헌분석 방법의 진전에 따라 북한교육 연구도 함께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과거 북한교육 연구는 자료접근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료 발굴은 물론 자료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소홀히 하며 학문적 게으름을 정당화 해온 경향이 있었다. 현대 북한교육을 연구하면서 시기상으로 오래된 자료나 객관성이 부족한 자료를 이용하거나, 자료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 없이 출처도 명시하지 않은 채 인용하는 사례가 허다했으며, 자료에 나타나는 고도의 은유성과 이중성 및 선전성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데 소홀하였다.

교육연구를 위한 문헌분석으로는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과 출판물이 보다 집중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연구를 위해 자주 활용되었던 김일성·김정일의 저작집이나 담화문이 공식성과 선전적 성격이 짙게 깔려 있었다면, 교육 관련 정기간행물은 비교적 정치적 선전성이 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교원들을 위한 정기간행물은 교육정책담당자와 교육행정관료들의 정책지향적 내용들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교장·교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정책의 구체적인 운영 현황 및 학교와 교실내부의 모습 등을 드러내주는 유용한 1차 자료로서 평가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인민교육>, <교원신문>, <교육과학> 등의 교육정간물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교원수첩, 노동신문, 인민, 정로, 근로자, 북한연감 등도 함께 이용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문헌분석에 있어서 자료의 대상과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문헌분석 연구의 범위를 확장한 대표적 연구자로는 소련의 문서와 자료를 활용한 신희숙과 미국의 북한노획문서를 활용한 김기석, 이향규, 김지수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즉 1992년 이후 러시아문서보관소의 기록들이 공개되면서 북한의 사회주의 국가건설시기부터 1970년대 근대화 시기까지의 기록이 풍부해지고 있다. 또한 미국 국립문서보존소에 소장된 북한기록을 분석함으로써 초기 북한교육의 형성과정과 교육주도세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연구에 또 다른 경향으로는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분석과 함께 ‘면담분석’이 활용되고 있는 점이다. 면담분석 방법은 구술자료⁴ 또는 심층면접과

³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p. 35~46

⁴ 김기석과 이향규는 구술사 연구의 이론적 쟁점과 문제점을 제시하면서 구술 연구의 필요성과 인터뷰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김기석·이향규, “구술사: 무엇을, 왜,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교육사교 연구노트』 합본호(서울: 서울대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교,

설문조사 등 여러 형태를 포괄하고 있다. 구술자료가 북한교육의 형성과정을 다룬 연구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면,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는 현대 북한교육의 이론과 현실을 교차 확인하기 위한 연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구술 자료를 활용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해방후 북한교육의 형성과정을 연구한 이향규(2000, 2001), 김기석(2001), 신효숙(2003)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한편 북한의 교육 현실 및 청소년들의 생활과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과 설문조사를 활용한 연구로는 한만길(1997, 1999, 2001), 조정아(2004a, 2005), 임순희(2005) 및 한국교육개발원(1994, 1998a)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면담분석 방법은 북한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기존 북한연구는 공식적이며 선전적 성격이 강한 문헌들을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문헌에 나타난 내용이 어디까지가 객관적 사실이고 현실은 구체적으로 어떤지 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들은 구술자료나 심층면접을 통해서 일부 보완이 가능하다. 해방 후 북한의 교육건설과정에서 학생·교사·주민들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1950-60년대의 주체형성과정에서 대학생들과 교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했는지 혹은 반대하다가 숙청의 과정을 밟았다면 그 과정은 어떠한지 등을 구술자료를 통해 보충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교과서·교복·학용품·기숙사비 등의 보장이나 학교의 교육비품과 기자재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의 질적 수준 및 교육현실에 대한 평가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학교와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 및 학생들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가치관과 생활양식, 학교 문화와 교실 문화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면담 분석은 공식문헌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 가용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정책 중심, 제도 위주로 구성된 북한교육사 연구는 면담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공식 교육사에서 누락되었거나 불충분하게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 보충될 수 있을 것이며, 공식문헌에 드러나지 않는 교육계의 사회 갈등과 개인의 경험들을 포괄할 수 있을 것이다. 면담분석은 북한교육 연구의 수준을 보다 심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근 북한교육 연구의 활성화에 힘입어 이론적 수준에서의 연구방법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졌다. 이론적 수준에서 연구방법은 한 가지 이론적 틀이나 방법론

1998), pp. 189~208.

을 사용하기 보다는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되고 있다. 북한학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내재적 접근, 역사상황적 접근, 비교사회주의 접근 등이 북한교육에 부분적으로 원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론 보다 북한교육 연구에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교육사회학의 연구방법론이다. 최근 북한교육의 연구방법은 기존의 정책적·제도적 분석 수준의 연구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사회학의 연구방법론과 성과들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우선 교육사회학의 ‘갈등이론’인 재생산론이 북한 교육에 적용되었다. 재생산 이론은 원래 자본주의 사회의 교육을 분석하는 것이었지만, 사회주의 사회의 교육을 분석하는데도 충분히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견해가 일반화 되어가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교육은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이데올로기 및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의 재생산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교육의 재생산 기능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재생산 이론은 경제적 재생산론자와 문화적 재생산론자로 구분되기도 한다. 한편 “신교육사회학(The new sociology of education)” 또는 ‘교육과정사회학’은 종래의 교육사회학이 사회계층과 교육기회의 분배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학교 내부의 현상에 등한시하였음을 비판하면서, 교육기관에서 가르치고 있는 지식의 사회성에 눈을 돌려 교육과정 및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집중 연구하였다. 최근에는 과거와 같이 ‘기능이론’이니 ‘갈등이론’이니 또는 ‘교육과정사회학’ 등 어느 특정이론의 틀에 매이지 않고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교육현상을 설명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다.⁵

연구방법이 척박한 북한교육 분야에서, 교육의 재생산 기능이 사회주의 국가 북한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연구한 최초의 연구자로는 김형찬(1969, 1988, 1990)을 꼽을 수 있다. 그는 북한 역사를 각 시기별로 구분하여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서 북한주민들의 이데올로기적 통합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밝히고 있다. 북한교육은 각 시기마다 사회경제적 발전의 필요에 따라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 통합에 기여함으로써 북한사회의 재생산 기능을 담당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교육사회학의 이론과 그 방법론을 북한교육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연구자로는 이향규, 조정아 등을 들 수 있다. 이향규(2000)는 서양 자본주의 국가형성과 근대 공교육의 등장 간의 관계를 분석한 아처(Archer M.)와 그린(Green A.)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북한의 국가형성과 교육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⁵ 김신일, 『교육사회학』 (서울:교육과학사, 2004), pp. 39~48

아쳐와 그린의 분석은 교육제도나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탁월한 분석을 하고 있지만 국가교육을 통해 전수되는 교육내용을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이항규는 교육내용과 학생들의 조직훈련과정을 ‘교육과정사회학’의 연구방법을 활용해 보완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현장은 정책담당자가 표방한 의도 되고 계획된 교육대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한편 현실적 여건에 따라 의도하지 않았던 교육이 실행되기도 한다. 따라서 북한교육의 공적 계획과 집행 간의 관계에 주목하여 학교의 공적지식의 특징과 전달 방식, 청소년들의 규율 훈련의 과정과 내용, 교사의 역할과 책무 등을 분석하였다.

조정아(2004a)는 보울스(Bowles S.)와 진티스(Gintis H.)의 교육의 사회재생산 이론과 윌리스(Willis P.)의 ‘반학교문화’의 개념을 활용하여 북한의 학교문화를 연구하였다. 학교문화의 탐구에서 주목한 점은 공식적 교육과정이 표방하는 규율과 실제 학교 규율이 작동되는 모습 간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국가가 특정한 교육 목적과 내용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바는 학교 내의 행위자들의 상호작용과 역동에 의하여 변형되고 타협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학교교육의 실제 모습, 학생들의 규율 위반을 과거 비행과 일탈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였으나 윌리스의 ‘반학교문화’라는 시각에서 새롭게 고찰하고 있다. 즉 학생들을 특정한 인간형으로 만들어내는 규율화의 과정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수용과 저항의 양상을 중심으로 학교의 실제 모습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교육사회학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최근 연구들은 당초 제시했던 목적만큼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원인으로는 북한교육의 현실을 보여주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진 교육의 모습을 충분히 분석해내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교육의 공적 계획과 집행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도 자료의 한계와 함께 분석의 객관성 확보라는 점에서도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교육사회학 연구방법의 활용은 선행 북한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그 가치가 평가됨과 동시에, 이러한 연구들을 더욱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론적 수준에서 북한교육 연구는 과거 제도적·정책적 분석으로부터 최근 미시적(micro) 접근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⁶ 과거에 주로 정치경제적 변화 속에서 교육 정책·제도·행정 및 교육엘리트의

⁶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주의적 이론을 거시적(macro)접근이라 하고 학교내부의 교육과정과 교사·학생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하는 것을 미시적(micro)접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변화와 특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과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고 실천되는 방식과 현상에 분석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전자가 교육의 행위자와 공급자의 입장이라면 후자는 교육의 수혜자인 학생·학부모·교원들의 행위에 보다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교육의 주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는 국가의 계획과 의도, 정책의 집행과 실천, 교육주도세력의 특징,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장점을 지닌 대신에, 실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현장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는 부족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따라서 교육의 공적 계획과 집행 간의 관계 분석, 국가가 학교교육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방식, 학교교육에서 실지로 이루어지는 교육내용과 수업의 방식, 학생과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 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의 미시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2. 교육정책과 목표

교육정책이란 사회적·공공적·조직적 활동으로서의 교육활동에 관하여 국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을 배경으로 강행되는 기본방침 또는 지침이다.⁷ 교육정책은 정치적 권력을 배경으로 하여 교육의 방향을 정하는 의사결정이라는 점에서, 통치집단이나 정치이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교육과 정치의 일치라는 원리에 따라 통치집단의 정치적 목적이 바로 교육정책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북한교육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선행연구는 북한 통치집단의 의도가 교육정책과 목표에 반영되고 집행되었음을 강조하였다. 교육은 김일성·김정일의 통치체제의 강화를 위한 정치교육이며, 이러한 원칙은 수령 우상화교육을 강화하는 형태로 교육정책과 목표에 반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은 주체사상과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이 교육정책 및 학교사업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목표가 학교교육과 교육내용에 어떻게 반영되

⁷ 김종길, 『교육행정신강』 (서울: 세영사, 1986), p. 314.

있는지 등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교육이 정치경제적 변화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기존 연구는 교육현상 자체에 대한 관심 속에서 교육정책과 목표가 논의되기 보다는 정치경제적 변인의 종속변수로서 교육문제가 논의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김정일의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고 있다. 이유는 김정일 시대는 김정일 후계체제가 완성되어 교육의 전면에 부상한 1980년대부터 김일성주석 사망 이후 대내외의 시련기를 거쳐 김정일정권이 공식 출범한 현시점까지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김정일 교육정책에 관한 대표적 선행연구로는 한만길(1997)⁸, 신호숙, 조정아의 논문을 꼽을 수 있다. 신호숙(2002, 2006)은 199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 통치담론의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변화를 시기별로 분석하면서, 특히 김정일 정권 출범 이후 교육정책의 변화, 및 교육정책이 학교교육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조정아(2004c)는 정치적 변화에 의해 구분되는 각 시기별로 김정일의 교육정책과 교육에 부과된 사회적 기능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였다. 위의 선행연구들은 교육문제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논지를 전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그들의 연구는 정치경제적 요인과의 상관관계 속에서 교육정책의 변화와 주요 쟁점들을 제시하고 있다.

선행 연구에 기초한 북한의 교육정책, 특히 김정일 시대 교육정책과 목표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교육정책은 일반적으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상황이나 경제적 요구에 의해 어느 한쪽이 강조되거나 교육체제의 변화가 동반되었다는 것이다. 김형찬(1988)은 <북한교육 발달사>에서 사회주의 교육에서는 전면적 교육의 원리에 따라 ‘학습과 노동’이 적절히 조화되도록 교육하는 것이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어느 한쪽이 강조되어 왔다는 것이다. 산업화 시기에는 경제적 요구에 따라 노동교육이 강조되었고 1966년 9년제 기술의무교육 시기는 기술교육을 강조하기 위해 개편되었지만 실제로는 기술학교를 없애면서 일반학교에서 노동교육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나

⁸ 한만길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활동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1997년까지 김정일 교육정책의 전개과정을 시기별로 구분하여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고난의 행군시기 북한 교육의 실상을 교원의 근무상황, 학생실태, 교육조건, 정치사상교육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김정일 교육정책이 갖는 한계와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김정일의 교육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초기 연구이지만 최근 시기를 다루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타났다. 또한 1975년 11년제 의무교육 시기는 초중등학교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을 중시하는 일반교육에 비중을 두고, 본격적인 직업기술교육은 고등교육에서 전담하도록 하였다. 한편 조정아(2003)는 1950년대에 종합기술교육을 도입하여 기술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등학교의 학제 및 교육과정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은 산업노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교육이 강조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산업화 시기와는 전혀 다른 김정일 시대에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사이의 균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김정일 시대의 바람직한 인간상은 주체이념에 투철한 주체형 인간이면서 동시에 전문적인 능력과 지식을 겸비한 사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간을 양성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최근 주체형 인간은 김정일체제의 '결사옹위'를 주창하는 체제수호의 극단적 인간형으로 탈바꿈했다. 반면에 기술전문가는 세계화·개방화의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창의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전문인력을 의미한다. 극도의 폐쇄성과 무한의 개방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인간상이 바로 북한만의 주체형 인간이다. 그렇다면 체제 유지자이면서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전문기술자인 주체형 인간이 어떤 방식으로 양성되고 있는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사회주의 교육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 축인 정치사상과 실용적 기술, 양자 사이에서 무게중심을 어디에 둘 것이냐의 문제로 환원할 수 있다. 김일성 사후에 통치담론을 재생산하면서 정치사상교육이 강조되었다면, 최근에는 이데올로기를 강조함과 동시에 경제난을 타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과학기술 분야의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컴퓨터 교육과 실용적인 외국어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사상교육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실용적 지식과 과학기술교육을 강조하는 최근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는지, 양자 간에 갈등은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최근의 학교교육정책은 1990년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면서 붕괴된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북한은 평등주의적 교육이념을 반영하여 1970년대에 이미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경제난과 체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교육의 기반 시설이 무너지고 무료교육이 유명무실한 사태에 이르렀다. 수업료는 무료이지만 교과서 배포량이 줄어들었고 학용품·교복·가방 등의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었다. 교사들은 국가의 식량배급이 중단되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먹고 사는 일에 바빠졌다. 한편 김정일정권은 이 문제를 학교후원단체를 통해 해결해 나가려 하고 있

다. 최근 교육성은 교육 여건과 환경의 개선을 위해 학교후원단체를 결성하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⁹

학교후원단체의 결성을 통해 현 교육문제를 타결하려는 정책은 북한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김지수(2005)는 북한은 해방 이후 교육 건설 과정에서 또한 한국전쟁 이후 복구과정에서 학교후원단체를 결성하여 주민들의 힘에 의거해서 학교건설과 개보수 작업을 추진했고 결과적으로 초등의 무교육제의 기반을 닦고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의 기반 시설을 정비했음을 밝히고 있다. 학교후원단체를 통한 교육건설 사업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회사금과 교육열, 국가의 재정지출, 사회단체들의 적극적인 방조가 결합되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한편 1940, 50년대와 전혀 다른 정치적 경제적 상황 속에서 학교후원단체의 결성을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김정일시대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질적 제고 문제는 학교후원단체의 구체적인 활동, 당정관료의 역할, 사회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보다 면밀히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의 확보를 목적으로 수재학교와 중점 대학에 정책적 관심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수재교육은 1980년대에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발전되기 시작했다. 수재교육은 “집단의 발전과 함께 개성의 발전을 보장하는 사회주의 교육의 중요한 특성”으로서 그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뛰어난 소질과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옹기 선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주어 기초과학부문과 전공부문의 유능한 인재”로 키우도록 하였다.¹⁰ 따라서 1990년대에 수재학교에 해당하는 외국어 학원과 제1중학교가 급속히 확대되었다.

이와 같이 1980년대에 이미 우수한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인식한 데 이어서 1990년대 이후에는 식량난·경제난을 극복하고 경제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수재학교 및 우수한 대학들을 확대 육성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학교정책의 방향이 과거 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해 초중등의무교육에 주력했다면 최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수재학교에 관심과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에 노동자·농민계층에게도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대학과 별도로 공

⁹ 신효숙, 『김정일시대 북한교육의 변화』 (서울: 통일교육원, 2006), pp. 14~15, pp. 29~33. 이 글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교육법(1999)”에 규정된 무료의무교육의 내용과 북한이탈청소년이 증언하는 의무교육의 현실을 함께 다루고 있다.

¹⁰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1984년 7월 22일).

장·농장·어장 대학과 같은 성인고등교육기관을 발전시켰다면, 최근에는 명문 대학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방향으로 학사 행정 개편이 단행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쟁점을 정리하여 교육정책 연구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일반교육과 기술교육 간에 균형을 유지하려는 교육정책이 김정일 시대 변화된 정치적·경제적 조건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학생들은 국가가 의도한 주체형 인간으로 실제로 양성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것은 교육의 공적 계획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써 북한 교육정책의 성과 및 한계와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셋째로, 김정일 시대 학교교육의 실태에 관한 실증적 연구뿐만 아니라 당정관료·사회단체·주민과의 관계 속에서 학교후원단체를 통한 학교교육 여건의 개선 문제를 연구해야 할 것이다. 넷째로, 김정일정권은 교육 전반에 걸친 구조적 개혁보다는 고등교육과 수재교육을 중심으로 부분적 개편을 통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자 하는데, 이러한 교육정책이 실효를 거둘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북한교육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秀越性) 중에서 어느 곳에 비중을 두고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양자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연구가 필요하다.

3. 교육제도

교육제도에 대한 쟁점은 의무교육 정책과 학제에 대한 논의로 살펴볼 수 있다. 북한 학제에 대한 객관적 논의와 평가는 시작단계에 있다. 1990년 초반까지 이 분야의 선행 연구들은 북한의 의무교육정책과 학교교육제도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다소 이념적 편향성을 드러냈다. 북한 교육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관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11년제 무료의무교육은 학생들의 노동력의 대가라는 입장이다. 북한은 개인 소유가 인정되지 않고 노동의 대가를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이므로 무료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 시간의 노동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므로 무료교육은 학생들의 노동력의 대가라는 것이다.¹¹ 북한은 1958년 7년제 무료 중등의무교육을 시행하면서 1959년부터 ‘학생의무노동제’를 시행하였다. 소학교 학생은 연간 2-4주, 중학교 학생은 연간

4-8주, 전문학교 학생은 연간 10주, 대학생은 연간 12주의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노동에 참여해야 한다. 학생의 노동력 동원에 대해서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한 취지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의 교육체계는 복선제라는 점에서 남한의 단선제와 다르다는 것이다. 남한의 단선제는 모든 학생이 일정 교육연한 동안 동일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면, 북한은 소정의 학력을 인정하는 체계가 일반교육체계, 성인교육체계, 특수교육체제로 나누어져 있는 비민주적 복선제라는 입장이다. 일반교육체계는 남한의 기본학제와 같이 중학교까지 동일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체계에 해당되는 예술계 학교, 만경대 혁명학원과 같은 혁명유자녀를 위한 학교, 수재 학교 등은 일반교육과 달리 별도로 선발하고 특수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비민주적이고 복선적 제도라는 것이다.

셋째로 정치사상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조기교육 및 의무교육의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나라에서는 조기교육 및 의무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북한 또한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와 같이 여성의 노동 동원을 용이하게 하고 집단주의 교육을 포함한 정치사상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기교육과 의무교육을 확대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기존 논의와 달리 북한 교육제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과 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논의에서는 정치사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고 노동력의 확보 차원에서 의무교육이 확대·발전되었음을 강조했다면, 최근에는 보다 다양한 논의가 개진되고 있다. 한만길은 의무교육 정책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이념의 실현에 기초를 두고 실시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은 이념적으로 노동자와 농민의 무산자 계급을 옹호하는 사회주의 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사회주의 사회의 평등교육을 실현하려면 제도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을 정착시켜야 하고,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의무교육정책이 추진되었음을 제시하고 있다.¹²

신효숙은 한만길의 논지를 발전시켜 북한 의무교육의 확대와 학교제도의 발달을 사회주의 평등이념과 교육원리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있다.¹³ 북한은 의무교육 기간의 확대와 함께 무료교육의 제도화를 통해

¹¹ 박용현, “교육제도와 행정”, 김형찬 편, 『북한의 교육』 (서울: 을유문화사, 1990), pp. 128~129.

¹²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pp. 59~67.

¹³ 신효숙, “북한 교육의 발전과정에 대한 논의”,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제1호(서울: 북한연

서 실질적 평등사회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해방 직후 재산정도에 따른 차등 교육비, 지방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노동자·농민 출신을 위한 특별과정 운영 등 교육개혁을 통해 반영되었다. 실질적 무료교육은 1958년에 농업의 협동화를 완료하면서 “교과서 및 학용품 무상급여에 관한 규정”, 및 1959년에 “학생들의 수업료를 전반적으로 폐지할 데 대하여”를 발표함으로써 법제화되었다. 이와 같이 북한의 의무교육 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 및 실질적 평등을 향한 무료교육의 제도화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지만 그 질과 내용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무료교육의 질에 대한 논의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 문제제기는 최근에야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연구>(1998a), 한만길의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2001), 임순희의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2005)에서는 학교교육 및 무료교육의 이론과 현실을 함께 다루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토대로 무상교육의 실태와 학교의 교육여건, 교원의 생활 실태 등을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이론적 분석 연구는 아니지만 북한 관련 통계와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학교의 교육여건과 실태를 분석한 기초연구로서 그 의미가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학교교육제도와 관련한 주목할만한 연구로는 이향규(1998)와 한만길 외 <남북한 교육체계 비교연구>(2004)를 들 수 있다. 특히 이향규는 학교팽창의 규모·과정·특징을 학교교육제도의 변천과정과 결부시킴으로써 북한 학교팽창의 동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로, 남한에서 학교팽창이 중학교무시험, 고교평준화, 대학졸업정원제와 같은 입시제도 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면, 북한에서 입시제도의 개편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학제와 의무교육제와 같은 근본적인 교육제도의 개혁과 함께 이루어졌다. 북한은 국가가 요구하는 국민을 양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제도의 개혁을 먼저 취하고 교육기회의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교육인구를 확대시켰다. 둘째로, 남한의 학교팽창이 수익자부담원칙과 사학의 확대와 같은 유상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북한의 학교팽창은 무상교육의 확대를 특징으로 한다. 북한에서는 모든 학교의 설립 및 관리를 국가에서 관할하며 국가의 예산에서 교육비를 집행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학부모나 집단의 지원이 주요한 재원으로 작용하지만, 그것은 조직적으로 수합된 후 사용됨으로써, 사

구학회, 2001), pp. 69~71.

적인 성격은 사라지고 공공성의 성격을 띠게 된다.¹⁴ 이향규와 한만길의 연구는 교육제도와 관련한 핵심 주제인 학제 변화를 교육 기회의 확대 과정 및 학교 팽창의 동인과 함께 분석하고 있고, 남북한 교육제도를 상호대립과 보완이라는 틀 속에서 객관적 비교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교육제도와 관련한 향후 과제로는 교육 여건과 실태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로부터 이론적 분석 연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북한에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상의무교육의 내용이 실제 북한 현실에서 어느 정도나 보장되고 있으며, 과거와 현재의 무료교육의 보장 실태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학교의 교육조건 및 무료교육의 질에 있어서 개인간·계층간·지역간 격차는 어느 정도이며, 무료교육의 보장에 있어서 경제난과 식량난이 심화되기 이전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문제가 제기된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교육의 사회적 기능

교육의 주요 사회적 기능으로는 사회화, 및 사회적 선발과 배치의 기능을 들 수 있다. 교육은 학생들을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사회화 하는 기능을 통해서 사회의 안정과 질서에 이바지 하고 있다. 교육의 사회화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는 북한 체제의 유지와 안정에도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인지 과거 선행 연구에서 적지 않게 다루어졌던 주제가 바로 북한 교육의 정치사회화 기능에 대한 연구였다. 북한의 정치체제와 이념이 교육을 통해서 유지·정당화·재생산되는 과정을 주로 연구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북한교육의 정치사회화의 효율적 기능과 함께 사회적 선발과 배치의 불평등성에 대한 연구에도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렇지만 사회적 선발과 배치에 있어 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선발과 배치의 불평등이 교육을 통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분석적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

북한 교육의 평등성과 불평등 문제는 선행연구에서도 종종 제기되었으나 최근 한만길(1997, 1998a), 신효숙(2001b, 2002), 조정아(2004c)에 의해 본격적으로 문제로 제기되었다. 북한교육 연구자들은 교육 기회의 확대를 통해서 교육의 대

¹⁴ 이향규, “북한 보통교육의 변화와 교육팽창,” 『한국교육사고 연구노트』 합본호(서울: 서울대 교육연구소 한국교육사고, 1998), pp. 270~281.

중화를 달성했다는 점에서 북한 교육의 평등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즉 북한은 4년제 의무교육에서 출발하여 1975년에 11년제 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고,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기반인 ‘사회주의적 인텔리’ 양성을 목표로 노동자·농민들을 위한 ‘일하면서 배우는 대학’을 설치함으로써 교육의 기회를 극대화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평등주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교육 불평등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 제기도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론적으로 북한사회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배제함으로써 계층간 소득분배의 상대적 평준화를 이루고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접근 기회를 상대적으로 개방함으로써 형식적 평등을 이루었다고 평가되었지만, 실제로는 북한사회 전반에 실질적 불평등이 확산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북한사회에는 당원과 비당원, 특권계층과 비특권계층 간에 실질적 불평등이 존재하며, 이것은 학교교육을 통해 유지·재생산되고 있다. 11년제 무상의무교육 및 고등교육을 대중화하려는 평등주의적 시도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이 사회 불평등의 재생산 기제로서 기능하고 있다. 교육의 불평등은 영재학교에 해당하는 수재교육기관의 존재, 대학입학시험과 졸업 후 사회 배치에 있어 교육의 역할 문제에서 제기되고 있다.¹⁵

신호숙(2001b)에 의하면 북한 교육의 불평등 문제는 특수목적교육체계에 포함되는 수재학교와 혁명유자녀를 위한 혁명학원의 존재에서 제기될 수 있다.¹⁶ 우선 혁명학원이 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혁명학원에는 1947년에 설립된 만경대혁명학원, 1958년에 설립된 강반석혁명학원, 해주혁명학원 등이 있다. 혁명학원은 원래 항일투쟁시기나 한국전쟁시 공을 세운 사람의 유자녀들을 위해 설립되었고, 정권 차원에서는 체제의 근간이 되는 ‘혁명정신’의 계승자 양성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혁명학원은 개인의 능력과 무관하게 국가를 위해 헌신한 출신성분이 다니는 학교로서 혁명 1,2세대가 거의 죽은 현 상황에서도 자손들이 계속 특혜를 받아야 하는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출신성분이 좋은 당·정간부의 자녀가 혁명학원에 입학하고 졸업

¹⁵ 신호숙(2001b), 앞의 논문, pp. 69~74

¹⁶ 북한의 교육체제는 학교교육, 성인교육, 특수목적교육 체계로 구성된다. 학교교육과 성인교육기관이 교육의 대중화를 지향한다면 특수목적 학교들은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특수목적교육체계에는 수재학교와 혁명유자녀를 위한 혁명학원으로 구분된다. 예체능분야의 수재학교로는 무용음악학교, 체육학교, 조형예술학교 등이 있고, 외국어 분야로는 6-7년제의 외국어 학원이 있고 자연과학분야로는 제1중학교가 각 도·시·군·구역에 설치되어 있다.

후 일류대학을 거쳐 그 사회의 핵심엘리트로 재생산된다는 점에서 특권층 학교로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혁명학원을 제외한 각 분야별 수재교육기관은 재능과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선발해서 국가가 그 분야의 최고전문가로 양성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어학원과 제1중학교도 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점을 지적받고 있다. 수재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하여 선발한다는 점에서 혁명학원과 구별되지만 불평등의 재생산에 일조한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고 있다.

외국어학원은 원칙적으로 소학교 2~4학년 때 영어를 잘하는 학생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외교관이나 무역업무 종사자 및 당정간부의 자녀에게 유리하다. 또한 엘리트 코스로 통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외국어학부나 평양외국어대학은 일반 중학생들에게 시험자격이 없고 외국어학원의 졸업생과 외국에서 귀국한 재외생에게만 입학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분야의 영재를 양성하는 제1중학교는 수학·과학·어학에 소질이 있는 성적 상위 10% 이내의 우수학생을 엄격한 시험을 통해 선발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성적 이외에 가정 배경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신효숙(2006b), 한만길(1998a)¹⁷은 개인의 수월성과 집단의 발전을 함께 추구하려는 수재학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림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가 대학진학의 필수코스로 인식되면서 대중의 교육 권리를 제한하고 당간부들이 독점하는 특권층학교로 변질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와 달리 조정아(2004c)¹⁸는 북한사회에서 수재교육은 경쟁적 엘리트주의에 해당된다고 본다. 경쟁적 엘리트주의란 특권계급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능력자에게 교육기회의 혜택을 더 제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수재교육은 국가적 투자차원에서의 엘리트 교육으로서 교육의 평등주의적 지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

한편, 북한교육 연구자 대부분은 북한 사회에서 불평등 구조의 재생산은 수재학교와 일반학교의 관계로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학교 구조 속에서 오래 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의 학교는 자본주의사회의 학교

¹⁷ 한국교육개발원(1998a),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 연구』, pp. 154~155.

¹⁸ 조정아(2004c), “김정일 시대의 북한 교육정책”, 『아시아교육연구』 5권2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p. 67.

와 마찬가지로 선발과 배치의 기능을 통해 교묘하게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 북한은 혁명화를 목표로 사회적 선발과 배치의 준거로서 개인의 실력보다는 당성과 출신성분을 우위에 둬으로써 그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정당화해 왔다. 개인의 능력보다 성분과 당성에 우위를 둔 선발과 배치의 방식은 대학입학 선발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개정된 북한의 대입제도는 예비시험을 통해 실력 본위의 선발 방식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¹⁹ 북한의 시험제도는 실력을 본위로 하는 예비시험, 성적·출신성분·정실관계가 작용하는 대학 추천권, 및 대학별 시험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다. 특이한 점은 대학의 결정권이 수험생에게 있지 않고, 국가가 입학시험을 치를 대학의 추천권을 배당해 주는 점이다. 따라서 대학추천권을 배정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성적보다는 직권과 정실관계, 뇌물수수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대학별 시험에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성적 이외의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대학 진학은 물론 직장 배치의 과정에서도 능력보다 당성과 성분이 중요시될 뿐만 아니라 정실 관계나 뇌물 상납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노동자·농민들이 수재학교나 일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는 당간부를 비롯한 특권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북한교육의 사회적 기능과 관련한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선행연구는 체제유지와 재생산을 위한 학교교육의 정치사회화 기능과 그 내용에 주목하였다면, 앞으로는 변화하는 북한사회에서 정치사회화 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북한 교육의 평등과 불평등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 북한의 수재교육은 개인의 능력과 재능의 차이를 인정한 차등교육의 제공이라는 점, 국가발전을 위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제도라는 점에서 새롭게 분석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수재교육과 고등교육의 기회배분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출신성분·직업·경제력 등의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수재학교 졸업과 일류대학 입학과는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대학 졸업자의 사회적 배치에 있어서 학생의 학업성취도·정치사상성·성분·가정배경 등의 요인이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심층

¹⁹ 북한은 1970년대 말까지 주로 '추천'에 의한 대학 입학제도를 실시해 왔으나, 1980년대부터 김정일의 지시에 의해 국가에서 실시하는 '예비시험'의 결과에 따라 대입시험에 응시하도록 하는 대입전형제도로 전환하였다. 예비시험 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대학 추천을 받고 해당 대학에서 치른 시험결과에 따라 합격이 결정된다.

적이며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사적(史的) 교육연구

북한교육사 연구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시기구분의 문제이다. 시기구분은 크게 정치사상적 변화의 기준에 따른 것과 의무교육의 발전에 따른 기준으로 구분된다. 전자의 대표적 연구로는 북한연구소(1977)에서 편찬한 <북한교육론>과 김형찬(1990)의 <북한의 주체교육사상>을 들 수 있다.²⁰ 후자의 의무교육의 발전에 따른 시기구분으로는 북한연구소(1983)의 <북한총람> 교육편과 이를 적용한 김동규(1990)와 한만길(1997)의 시기구분을 들 수 있다.²¹

교육사 연구는 정치사상적 요인과 교육적 특성 중에서 어느 요소를 반영하여 시기 구분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연구의 내용과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정치사상적 변화에 따른 시기구분은 교육연구에 있어 시대적 변화와 정치경제적인 구조적 요인이 함께 분석되는 장점을 지닌다. 이는 정치사회의 변화라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이해를 가능케 한다. 하지만 교육이 정치체제나 이념적·경제적 요인에 종속될 뿐만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육현장이나 교사와 학생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분석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교육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시기구분은 교육 현상과 변화가 강조되는 대신에 교육의 정치경제적 배경에 대한 요인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의무교육제도의 변천에 따른 시기구분은 교육현상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배경과 교육의 일반적 특성을 함께 고려한 시기 구분이 필요하며 8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시기구분도 새롭게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즉 김정일 후계체제의 완성과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기(1980~1990), 북한의 대내외적 시련과 교육 붕괴 시기(1990~1998), 김정일 정권 출

²⁰ <북한교육론>(1977)에서 김영식은 공산주의 도입기(1945-1950), 전후 복구 및 건설기(1950-1959), 생산기술교육 및 혁명전통교양 확립기(1960-1966), 유일사상 확립기(1967-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김형찬(1990)은 <북한의 주체교육사상>에서 주체사상의 형성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마르크스주의 도입기(1945-1955), 주체사상 창시기(1955-1960), 주체사상의 확립기(1960-1970), 주체사상이론 정립기(1972- 현재)로 구분하고 있다.

²¹ 김동규(1990)는 해방후 교육정책 정립기, 조국해방전쟁기, 전후 재건기, 7년제의 의무교육 시기, 9년제 의무교육시기, 11년제 의무교육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한만길(1997)은 교육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주의 교육 도입시기, 전후 복구시기, 기술교육강조시기, 유일사상확립시기,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시기, 고등교육의 대중화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범과 교육 정상화 시기(1998~현재)로 구분하여 각 시기별 교육사 연구가 진척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교육사 연구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연구가 각 시기별로 교육의 이념·제도·내용 등을 정리하는 개론서의 특징을 지녔다는 것이다. 북한의 전체 시기를 간략하게 포괄하는 연구는 다수 있지만 북한교육사를 주제별 또는 시기별로 심층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서도 1990년대 후반 북한교육사 연구의 주목할만한 성과로는 해방 이후 북한교육 건설시기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점이다. 북한교육 건설기를 둘러싼 최근의 연구성과들은 북한교육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들을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시기 연구는 신호숙(1998), 이향규(2000), 김기석(2001), 조정아(2003), 김지수(2005)에 의해 이루어졌다.

신호숙(2001a, 2003)과 이향규(1999, 2000)의 연구는 해방 이후 북한교육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여러 점에서 상반되면서도 상보적인 특징을 지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자가 소련의 외교문서를 중심으로 소련군정 시기 북한 개혁에 실지로 참여한 소련측 인물이 생산한 여러 종류의 기록들을 주로 활용하였다면, 후자는 미국 국립문서보존소에 소장된 한국전쟁당시 미국이 노획한 북한문헌과 기록에 의존하여 분석을 하였다. 둘째로, 두 연구는 시기적으로 소련군정기와 1950년까지로 한정하여 북한의 초기 교육개혁을 국가형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지만 연구의 방향은 상이하다. 전자가 소련군정기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교육정책·교육제도·교육엘리트의 분석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후자는 보통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북한의 보통사람들이 제도교육을 통해 어떻게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변화되는지에 관심을 맞추었다.

셋째로, 두 연구의 연구방향과 자료 활용의 차이는 북한교육의 형성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전자가 북한과 소련의 공식문헌 및 소련측이 생산한 자료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국가차원의 북한 교육정책의 특징과 실제, 이에 미친 소련의 역할과 영향에 주목하였다면, 후자는 미국의 ‘북한노획문서’ 중 교사이력서나 학생조직생활 등의 교육문서를 활용하여 국가계획 차원의 교육정책이 교육과정, 교사양성, 학생지도에 구체적으로 전달되고 실천되어가는 현상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전자는 북한교육 형성에 있어 북한엘리트와 소련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반면에 후자는 북한의 엘리트와 인민의 힘을 강조하고자 했으나 그 힘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한계를 보여주는데 반하여,

김지수(2005)는 교육관료들이 학교후원단체의 결성을 통해 주민들을 학교 건설 사업에 참여시키고 동원시키는 과정 속에서 인민들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한국전쟁시기부터 1960년대 초까지의 북한교육사 연구는 조정아(2003)와 신효숙(2005)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산업화시기 노동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연구이다. 이어서 김지수(2005)는 1960년대까지 북한의 교육관료제를 연구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가세하였다.

조정아(2003)는 1960년 초반까지 산업화 시기에 공장과 학교에서 노동교육체제가 형성되는 과정과 그 특질을 분석하고 있다. 노동교육의 형성을 산업화라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하면서, 학교교육과 성인교육 분야에 일어난 중요한 변화를 산업노동자의 양성이라는 사회적 과제와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 즉 산업화에 필요한 기술인력 양성의 요구에 부응하여 중등학교의 제도와 내용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교육과 노동의 결합이라는 소련의 종합기술교육의 원리가 북한의 학교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공장의 직업기술교육제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게 되었는지 등을 분석하였다.

신효숙(2005)은 해방후 1960년까지 북한사회의 변화 속에서 고등인력의 양성과 그 특징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내내의 정치경제적 변화 속에서 체제의 근간이 되는 당·정관료, 기술전문가, 학자들이 고등교육기관을 통해 양성되는 현황과 특징, 그리고 고등인력의 성격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해외유학생의 파견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정권은 1950년대 중반의 정치경제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과정에서 ‘주체’의 문제를 제기했고, 반종파투쟁의 사상검열운동을 통해 반대세력을 일소하고 김일성 유일지배체제의 기초를 마련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상검토와 숙청이라는 선별과정을 거치게 되는 지식인과 고등인력이 주체의 형성과 어떤 관계에 있으며, 고등인력정책은 어떠한 변화를 보여주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김지수(2001, 2005)는 교육행정 연구를 발전시켜 북한의 교육관료제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교육관료제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해방 후부터 한국전쟁 이전까지를 행정기관 중심 교육관료제, 한국전쟁이후 1960년까지를 당-국가중심 교육관료제, 1961년 이후의 시기를 수령중심 교육관료제로 그 유형을 분석하였다. 교육행정제도의 특징과 운영방식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켜 북한의 역사적·정치적 과정과 관련하여 교육관료제의 형성과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교육과 그 교육행정체계를 관리해 온 교육관료제가 어떤 역사적 과정과 배경 속에서 어

떻게 형성·발전되었는지를 고찰하였으며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관료제의 성격을 분석하고 있다.

위의 연구자들의 일련의 성과는 부문별, 주제별 교육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중등교육, 고등교육, 노동교육, 교육행정제도와 같은 부문별 연구가 적지 않게 이루어졌지만 그 연구의 경향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개론적이며 종합적인 성격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최근의 부문별, 주제별 연구의 성과는 대내외 정세 및 사회경제적 변화와 관련하여 교육의 변화와 특징을 역동적이며 다면적으로 다루면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이들 연구는 다양한 자료를 발굴·활용하고 각 연구자의 관점과 시각을 반영하여 노동교육, 고등교육, 교육행정이라는 기존 연구영역을 새롭게 조명하여 연구 지평의 심화에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해방 이후 북한교육 건설과정시기의 교육사 연구 이외에도 1960년대 이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각 시기별 북한교육의 심층적·분석적 연구가 후속과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V. 맺은 말

최근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북한교육 연구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북한교육 연구방법의 성과로는 1차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분석과 함께 면담 분석을 활용한 점이다. 구술자료나 심층면접 형태의 면담 분석은 북한교육의 이론과 현실을 교차 확인해주는 방법으로서, 공식 문헌 위주로 이루어져 있는 기존 가용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론적 수준에서의 성과로는 기존의 정책적·제도적 분석 수준의 북한교육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사회학의 연구방법론과 성과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점이다. 대부분의 연구들은 제도적·정책적 분석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국가의 계획과 의도, 교육정책의 집행과 실천, 교육주도세력의 성향과 특징,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한편 최근 교육사회학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는 거시적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미시적 수준의 북한교육 연구를 통해서 국가적 차원의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서 교육과정, 교과서, 교사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고 실천되는 방식과 현상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즉

구조와 행위자간의 역동에 주목한다든지 공식적 교육과정과 함께 전개된 교육과정의 분석에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선행 북한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은 북한교육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정책 특히 최근 김정일 시대 교육연구의 성과로는 (1) 일반교육과 기술교육의 균형 문제와 이에 따른 교육체제의 변화, (2) 정치사상과 실용적 지식 사이에 균형 문제와 주체형 인간의 양성, (3) 학교교육의 정상화 문제, (4) 수재학교와 고등교육 정책 및 경제발전과의 관계 등 다양한 연구 쟁점이 향후 북한교육의 발전 방향이라는 틀 속에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또한 북한 교육제도의 평등주의적 특징과 불평등적 요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한교육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학교교육제도를 둘러싼 교육의 평등성 및 무료의무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가 쟁점으로 등장하는가 하면 최근 북한교육제도의 특징으로 부각된 수재교육을 둘러싼 국가적 인재와 교육 불평등과의 관계가 논쟁거리가 부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방 이후 북한교육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할 수 있도록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교육 연구물이 집중적으로 산출된 점은 이후 북한교육 기초연구의 활성화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 쟁점들이 북한교육 연구의 성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우선, 각 영역에서 제기된 쟁점과 이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후속 연구가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북한교육 연구는 아직 주제별·현안별로 쟁점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이 될만한 사안을 제시하는 형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북한 교육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쟁점에 대한 논의는 아직 시작단계일 뿐이다. 따라서 각 쟁점에 대한 후속연구가 주제별, 현안별로 재개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교육의 학문적 체계화를 위해서는 최근의 문헌분석, 면담분석 방법 등을 새롭게 적용하고, 다양한 북한교육 영역에 재생산이론·미시적 연구·역사사회학적 접근 등 교육사회학의 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시도에 대한 평가 작업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교육 연구의 과제로는 연구 영역·주제의 다양화와 함께 특히 기초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교육 연구가 양적으로는 상당히 증가하였지만 주제별 연구 성과에서는 양적 불균형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자면, 최근 남북한간 활발한 교류, 북한이탈주민의 대량 입국에 힘입어 남북한

교육의 비교분석 연구,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남한교육 적응 실태와 방안을 다룬 연구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남북한 통일에 대비하여 정책적으로 수요가 많은 만한 영역에 연구 주제가 편중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정책적 수요가 많은 특정 분야의 연구물은 매년 편수가 증가하는 데 반해 기초연구를 중심으로 한 일부 분야의 연구 성과는 몇 편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않다. 기초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정책적 효용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만 양산된다면 결과적으로 기초가 부실한 정책연구로서 그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다른 과제로는 북한교육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초 자료집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간하는 문제이다. 북한연구는 자료의 유무 여부에 따라 연구 영역의 편중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연구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연구자세도 필요하지만 정책연구기관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이다. 후속 연구자들이 연구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1차 자료에 기초한 자료집이나 북한이탈주민의 교육관련 녹취록이나 자료집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교육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타 분야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교육 연구자 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타 학문에 비해 연구의 역사가 극히 짧고 연구하는 계층도 일부로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성과가 축적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북한교육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기초 연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 즉 현안이나 정책연구와 별도로 기초 연구를 묵묵히 수행하여 연구의 토대를 다지고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문제이다. 당장의 현안이나 중단기적 계획 하의 통일준비와 관련한 북한교육연구도 필요하지만 통일 민족의 장기적 비전과 북한의 이해라는 큰 틀에서 북한의 국내외 역사적·구조적 배경 속에서 북한교육을 분석·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작업에 북한교육 연구자들이 대거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

■ 접수: 4월 4일 / ■ 심사: 6월 2일 / ■ 채택: 6월 20일